

□특집□

한국정부의 Y2K 해결대책

이 련 주[†]

◆ 목 차 ◆

1. 서 론	4. 종합평가
2. 추진경위	5. '99년도 추진계획
3. 그간의 주요추진시책	6. 결 론

1. 서 론

Y2K는 세계적인 문제이다.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는 어느나라이든지 Y2K에 자유로울 수는 없다. 특히 정보화·산업화의 정도가 큰 나라일수록 그렇다. 1960년대 컴퓨터 보급초기에 메모리비용의 절감을 위해 연도 4자리를 2자리 표기할 때부터 Y2K는 이미 예견된 문제이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Y2K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응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중반이후 부터이다. Y2K는 발생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고, 어느 시스템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문제를 확인해도 문제해결을 최종적으로 공급사에게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Y2K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Y2K는 국가 및 기업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전산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의 문제」이다.

이러한 Y2K는 99년초부터 소위 「버그 99 소동」을 계기로 우리사회에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Y2K 문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Y2K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정부는 Y2K 문제해결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등 일반국민의 궁금증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정부가 지금까지 Y2K 문제해결을 위해 추진한 대책과 '99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2. 추진경위

정부차원에서 Y2K에 대응을 시작한 것은 '97년 2월부터이다. '97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아직 Y2K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정부는 세미나,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국가 사회전반의 문제인식확산에 주력하는 한편 중앙 행정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한국전산원에 Y2K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그러나 Y2K는 「2000년전 해결」이라는 시간적인 제약성이 있고, 문제발생의 범위가 광범위하며, 이전에 해결해 본 경험이 없는 새로운 문제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국가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조치가 없으면 문제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98년 3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국무조정실에서 「Y2K 종합대책」을 수립,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범국가적으로 본격적인 문제해결에 착수하였다.

즉 민간부문은 자력문제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는 인력·자금·세계상의 조치 등을 통하여 문제해결을 지원·유도하고, 정부는 Y2K가 국가경

† 정회원 : 국무조정실 산업심의관실 서기관

제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 통신, 전력 및 에너지, 산업자동화설비, 운송, 항만, 의료, 원전, 중소기업, 행정 등 10대 중점분야의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 나간다는 기본원칙하에 문제해결을 추진하여 왔다.

또한 국무조정실에 '98. 4월 민관합동 「Y2K 대책협의회(위원장 : 경제행정조정관)」를 설치하여 Y2K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진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오고 있다.

3. 그간의 주요 추진시책

3.1 효과적인 관리체계 구축

각기관이 Y2K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 단계별로 영향평가('98.8), 변환('99.2), 검증('99.4), 시험운영('99.8) 등 범국가적 대응기한을 설정('98.7)하고, 일반지침, 영향평가지침, 비상기획지침, 변환 톨 선정지침 등 문제해결 활동지침을 배포('98.7)하였다.

또한 Y2K 추진진도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사회전반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가 범국가적 대응기한에 따라 추진실태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있으며, 행정분야는 행정자치부가 격월마다 추진실태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있다. 또한 서면에 의한 추진실태의 모니터링을 보완코자, Y2K 발생시 위험도가 큰 57개기관에 대해서는 한국전산원의 「민간전문평가단」을 통해 현장확인과 기술자문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관리체계의 법제화를 위해 '98.12월에는 「컴퓨터2000년문제의해결을위한대책수립및지원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한 바 있다.

3.2 문제해결의 지원·유도대책 추진

민간부문의 Y2K 문제해결과 관련하여 정부의 역할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Y2K 문제해결에 필요한 「각종자원」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이고, 두 번째는 Y2K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이다.

정부는 민간부문의 Y2K 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Y2K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업대책과 연계, '98년중 6,300명을 양성하였으며, Y2K해결에 필요한 자금을 정보통신부의 정보화촉진기금과 중소기업청의 구조개선자금을 활용하여 저리로 232억원을 융지하였다.

또한 Y2K해결의 외부용역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15%, 대기업 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지난해 말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99.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의료, 항만, 가스, 중소기업 등 분야별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Y2K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중심으로 시험용 계측기, 로봇 등 산업용설비에 대해 기술자문을 실시하는 한편, Y2K 문제해결업체를 알선해 주고 있다.

'99년 1월에는 정보통신진흥협회 산하에 「Y2K 인증센터」를 설립하여 기업의 Y2K 문제해결 확인요청에 적극 대응토록 하였다.

정부는 기업의 Y2K의 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상장법인의 Y2K 대응상황 공시를 의무화('98.7)하여 반기보고서와 결산보고서에 Y2K대응상황을 포함, 증권거래소에 제출·공시토록 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이를 고려하여 주식매입 또는 당해기업의 신용정보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금융기관은 여신심사시 기업의 Y2K 대응상황을 반영('98.12)토록 하여 Y2K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불이익을 받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들이 총 여신 10억원 이상 기업(10,059개)의 Y2K 대응실태를 평가한 결과, 38%인 3,820개 기업이 중위험군 이상으로 평가되어 문제해결을 약속하는 추가약정서의 제출, 신용평점 하락, 대출금리 인상 등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공공기관은 '98년 7월부터 Y2K 해결제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토록 하여 Y2K 미해결제품은 구매선에서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3.3 홍보 및 국제협력 추진

'98년중에도 Y2K의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내외경제 등 언론기관과의 합동캠페인, 홍보비디오 제작보급, Y2K소식지 발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난해 APEC 정상회의, 한·일, 한·미간 정상회담 성과를 토대로 실무차원의 협력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전, 통신, 금융 등 부문별로 국제기구의 정보 및 인력교류 비상계획 수립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4. 종합평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Y2K해결에 다소 늦게 대응한 우리나라는 그나마 짧은 대응기간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Y2K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유대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협력·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통신, 전력, 행정 등 국가의 주요분야는 대부분 변환단계이며 금융분야는 테스트단계에 있다. 외국에서도 우리의 Y2K 문제해결노력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세계적 컴퓨터 컨설팅기관인 가트너그룹은 우리나라의 대응상황을 최하위인 4등급('97.12)에서 2등급('98.9)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으며 전세계 주요 금융기관이 Y2K 문제해결을 위해 결성한 G2K(Global 2000 Co-ordinating Group)은 우리나라가 상하수도 분야는 대응이 미진하나, 금융·행정·통신분야는 잘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Y2K는 누구도 완전한 해결을 자신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인 만큼 '99년도에도 지난해 분야별 성과분석을 토대로 범국가적으로 Y2K 문제해결에 총력을 기울려 나갈 계획이다.

5. '99년도 추진계획

정부는 '99.2.9(화) 국무회의에 「Y2K '99년도 추진계획」을 보고·확정하고, 각부처에 시달하였다. '99년도 추진의 기본방향은 해결시한이 10여 개월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문제해결이 취약한 부문에 집중적인 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분야별 모의테스트 실시와 비상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5.1 추진체계의 보강

국무총리 주재로 금융, 통신, 전력 등 정부의 중점관리분야의 소관부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등으로 「Y2K 관계장관 회의」를 2개월마다 개최하여 국가사회전반의 Y2K 해결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정부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키로 하였다. 또한 국무조정실 경제행정조정관이 위원장인 「Y2K 대책협의회」의 기능을 보장하는 한편, 매월 개최하여 Y2K 관계장관회의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였다.

국가사회전반의 Y2K 대응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에 국장급을 반장으로 하는 「Y2K 상황실」을 설치하고, 각기관의 「Y2K 대책반」에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기능을 보강토록 하였다.

5.2 중점분야의 관리강화

Y2K 문제해결책임을 명확히 하기위해 각기관의 보유설비에 대한 Y2K의 해결책임은 1차적으로 당해기관장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각부처는 소관별로 중점분야에 속한 기관의 Y2K해결상황을

관리·지원하는 주관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부여하였다.

이와 아울러 현재의 10대 중점분야에 국방, 수자원, 환경부문을 추가하여 13개로 확대하는 한편, 중점분야를 세분화하여, 예를 들면 항공·육상교통·지하철은 건설교통부가, 철도는 철도청이, 교통신호체계는 경찰청에게 책임을 부여, 관리책임을 명확하게 하였다.(별첨)

중점분야 이외에도 방송, 식품, 교육 등 국민생활과 관련이 많은 분야는 소관부처에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지원토록 하였다.

또한 중점분야에 속한 기관간 경쟁을 유도하고, 국민에게도 Y2K 대응상황을 알리기 위해 Y2K로 인한 서비스의 장애가 없는 경우 스스로 이를 선언토록 하고, 정부의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자기 확인(Self Declaration) 제도를 신설키로 하였다.

'98년에도 Y2K 문제해결촉진에 큰 역할을 담당했던 현장진단활동은 가급적 '99년 상반기에도 집중 실시토록 하여 Y2K 문제에 대한 기술자문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며, 경실련에 「Y2K 감시센터」를 활용하여 정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나갈 계획이다.

5.3 Y2K 문제해결을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2000년이 10개월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Y2K 문제해결의 시간과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각종 지원시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Y2K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을 위해 「업종별 협의체」를 구성토록 지도·감독하는 한편 제조업체가 생산제품에 대한 「Y2K 정보」를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여 중소기업, 가정 등 제품이용자가 문제해결에 활용토록 조치한 바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 Y2K해결을 위해 입찰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할 경우, 선정과정에서만 2~3개월에 걸쳐 물리적으로 문제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

기 때문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의 유권해석을 통하여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허용토록 조치한 바 있다.

Y2K는 해결비용의 부담주체, 손해배상 등과 관련하여 많은 법적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실제 Y2K 문제해결현장에서도 향후 법적책임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Y2K 문제해결작업 보다는 비생산적인 책임전가에 치우쳐 문제해결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Y2K 법적문제는 대부분 민사상의 문제이며, 워낙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 일률적인 원칙을 정립하기는 매우 어렵다.

다만 정부에서는 지난해 한국법제연구원을 통하여 「Y2K관련 법·제도적 대응방안」에 대해 용역을 실시하여 Y2K담당자들의 법적인 이해를 높이고, 법적분쟁에 대비한 조치방안 등에 대해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 연구보고서를 각기관에 배포하여 참고토록 조치한 바 있다. 아울러 금년 상반기에도 외국사례 등에 대해 심층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마련, 추가로 배포할 예정이다.

5.4 모의테스트 중점 추진

금년 상반기에는 중점분야별로 모의테스트를 조속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각부처로 하여금 모니터링하도록 할 계획이다. 만약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정통부의 Y2K상황실로 즉시 통보토록 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토록 할 계획이다.

금융분야는 금년 상반기중 은행·증권·보험망에 대해 각각 2회씩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이며, 미·일·영등 주요국가간 실시 예정인 「Global Payment Systems Test」에 참여할 예정('99.6)이다.

통신분야는 한국통신의 경우 Y2K 교환기 133대에 대한 수정작업을 금년 8월말 완료를 목표로 Y2K 문제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실시하는 국제연계테스트(32개국)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업종별 주요 공통설비에 대해 시범테스트를 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결과를 관련 중소기업에 전파할 계획이다.

5.5 비상계획수립 철저

누구도 Y2K 문제해결을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비상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를위해 각기관별로 주요시스템에 대해 수작업, 시스템복구 등에 관한 비상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변환, 검증, 시험운영 등 전단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는 한편, 모의훈련 등을 통하여 철저히 검증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비상사태 발생에 대한 국가경제의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분야간 공동대응을 위한 범국가 차원의 비상계획수립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5.6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Y2K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어도 인력·기술·자금부족으로 대응이 미진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의 구조개선자금(100억원), 정보통신부의 정보화촉진기금(200억원)을 확보하여 저리로 대출을 해 줄 계획이며, 국민은행·기업은행 등 금융권자금으로도 중소기업의 Y2K 문제해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청의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시 Y2K확인서 첨부를 의무화하여 중소기업의 Y2K 문제해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Y2K 실직전산전문가 등으로 「순회점검반」을 구성, 10,000여개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5.7 홍보강화 및 국제협력의 추진

Y2K는 전세계가 2000년전까지 완전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Y2K를 해결한 기업은 오히려 매출이나 수출증가 등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바와 같이 Y2K는 해결해 봐야

본전인 것이 아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집중 홍보하여 Y2K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Y2K 대응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한국전산원의 인터넷홈페이지(한글·영문)를 개선 보완하고, 재외공관 등에도 영문홍보자료를 배포하여 대외신인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99년 상반기중에는 「Y2K 캠페인주간」을 설정하여 그간의 Y2K 해결성과를 집중 홍보함으로써 국민들이 갖고 있는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Y2K와 관련해서는 국제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UN·APEC·World Bank 등 국제기구와는 물론이고, 미·일등 선진국과도 국제협력활동을 강화하여, 외국의 Y2K 문제해결 정보의 신속한 입수 및 전파, 연계모의테스트, 비상계획 등 협력 프로그램에의 적극 참여, 외산기자재 공급업체와의 협조강화와 불성실 공급업체 사례를 수집하여 관련국가에 협조를 촉구해 나가고 있다.

이와 아울러 가트너그룹, G2K 등 국제평가기관에 우리의 대응상황을 주기적으로 통보하여 대외신인도를 높혀 나갈 계획이다.

6. 결 론

지금까지 Y2K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Y2K는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다. 인력·예산·조직이 뒷받침되어야 해결이 가능한 정책적인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기관이든지 최고 관리자가 이 문제에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기관내부에서 전산부서에만 이 업무를 맡겨 놓아서는 안된다. 많은 업무중 하나의 업무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Y2K는 총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Y2K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라면 2000년이 지나서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2000년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여러모로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제 10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 정부의 Y2K 총력대응체제와 각기관 최고관리자의 해결의지가 조화를 이루어 2000년을 자신있게 맞이할 수 있도록 국민모두가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련 주

1988년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1988년 제32회 행정고시 합격
 1990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9년 현재 국무조정실 산업
 심의관실 서기관

【 별첨 】

重點管理 對象分野

중점분야	세부분야 (예 시)	주관기관
금 융	◦ 은행, 증권, 보험, 종합금융, 제3금융권 * 새마을금고는 행정자치부에서 관리	한국은행
국 방	◦ 무기체계, 국방운영관리	국 방 부
통 신	◦ 통신사업자(유선, 무선, 위성 등)	정보통신부
운송(여객안전)	◦ 항공, 육상교통, 지하철 ◦ 철도 ◦ 교통신호체계	건설교통부 철 도 청 경 찰 청
해운항만	◦ 항만시설, 선박(여객안전)	해양수산부
환 경	◦ 폐기물관리 등 환경기초시설	환 경 부
전력 및 에너지	◦ 전력 - 수자원공사소관 수력설비 - 한국전력소관 설비, 민간전력설비 등 ◦ 에너지(석유, 가스, 석탄 등)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
산업자동화설비	◦ 각부처소관 산하기관, 민간단체의 설비 ◦ 각부처소관 이외의 철강, 전자, 반도체, 조선, 정밀화학, 기계 등의 설비	각부처 산업자원부
원 전	◦ 안전설비, 감시설비, 제어설비 등	과학기술부
의 료	◦ 의료기기, 의약품, 병원의 정보시스템(국공립의료원, 국립대학, 부속 병원, 원자력병원, 보건소 포함) ◦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복지부
중소기업	◦ 중소기업의 정보시스템, 비정보시스템	중소기업청
수 자 원	◦ 광역상수도, 댐관리 ◦ 상하수도	건설교통부 환 경 부
중앙·지방행정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행정자치부

* 주관기관은 예시에 나타난 설비 이외에도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대상에 포함시켜 관리